

말 뿐인 '부적격'...민주당 광주시당 공천 심사 '논란'

탈당·음주운전 전력자 모두 적격 판정...시당 상무위서 최종 심사 예외 규정·이의신청 통해 구제 잇따라...심사 기준 실효성 도마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지방선거 공천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탈당, 음주운전, 부정부패 등 과거 전력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천을 신청한 대부분이 심사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마감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 신청 공모 접수에서는 총 171명이 적격 판정을 받고 면접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후보는 22

명, 광역의원 후보는 61명, 기초의원 후보는 88명이다. 광역의원 공천신청자는 오는 27-28일, 기초의원 공천신청자는 3월 2-3일 면접이 예정돼 있으며, 기초단체장 면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보자 자격에 대한 부적격 유형을 ▲살인·성폭행·강도 전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등 '예외 없는 부적격'자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3회 이상 탈당 등 당론 위반 경력자로 구분

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부모 실거주 주택,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 예외 적용례를 들여다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1명과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1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면접 자격을 얻었다. 세 번째 유형인 공천 불복으로 인한 상습 탈당 등 후보자는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후 중앙당 공천선거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가 다시 광주시당에 통보된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상습 탈당 및 당

론 위반으로 중앙당 심의를 거친 신청자들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28일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으면 후보자 자격을 인정받아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부적격 심사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보다 당 기여도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도왔던 점이 우선시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산구 지역 광역의원 후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후보자 자격을 받았다. 기초의원 출마자 B씨는 경선 불복

으로 탈당을 했지만, 대선과 총선 기여도를 인정해 후보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후보 C씨 역시 제21대 대선 기여도가 고려돼 이번 심사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경력과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선 후보를 선별하고 있다"며 "감점과 가감상 비율을 적용해 공천 기준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정계 경력자, 최근 8년 이내 탈당 경력자, 공천 불복 경력자에게는 마이너스 10% 감점을 적용해 경선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신수정, 시의회 예산으로 '후원계좌 명함' 제작...정자법 위반 신고

의정활동비 140만원 집행...북구청장 출마 앞두고 예산 사적 활용 논란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적시한 명함을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배포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인 신 의장은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기재한 혐의에 중앙선거관리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신 의장이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적시한 명함을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 및 배포했으며, 후원회 명함은 '정치자금', 의정활동 명함은 '세금'으로 회계 자체가 다름에도 신 의장이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원 명목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억6000여만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명함 제작 비용은 평균 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신 의장은 지난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차례에 걸쳐 총 140여만원을 집행해

의정활동용 명함을 제작·배포했다.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회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신 의장이 제작한 일부 명함 뒷면에는 '신수정후원회'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됐다. 뒷면에는 신 의장의 주요 약력도 포함됐다. 다른 의원들이 연간 50만원 안팎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과 달리, 의장은 대외 업무가 많은 직책이라는 이유로 3배 규모의 예산을 사용했다. 지방의회 예산은 의정활동을 위한 공적 경비다. 개인 정치활동이나 후원금 모금 홍보에 사용될 경우 부정적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5조 등에 따르면 공적 예산을 개인 정치활동 비용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개인 후원금 모금을 위해 제작된 홍보물을 공적 예산으로 제작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간주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신수정 의원은 "명함 제작 당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진행 과정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은 선관위에 확인하고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후원회 계좌를 제외한 다른 디자인의 명함을 사용 중이다. 신 의원 외에도 15명의 의원이 공적경비로 명함을 제작했으나 후원회 계좌 적시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의회와 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에게 지급한 명함 제작비는 집행여부를 확인하지만, 명함 이미지 자체는 확인하지 않아 후원회 계좌 기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된 명함에 후원회 계좌가 포함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6·3 지선 대비 모의개표 시연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의개표 시연회'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스쿨존 42곳 통학로 안전 강화 나선다

30억 5000만원 투입...방호울타리 설치 등 대대적 정비

광주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42곳의 교통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세우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전액 시비로 30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42곳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24억 원이 쓰이며, 1700m 구간의 방호울타리 설치에 3억 5000만 원, 257곳의 실태조사에 3

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현재 광주지역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총 506곳에 달한다. 시설별로는 유치원이 213곳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156곳, 보육시설 128곳, 특수학교 9곳 순이다. 지원 예산은 자치구별 보호구역 개소수와 비율 등 현장 여건에 맞춰 차등 배분됐다. 이에 따라 관내 스쿨존이 161곳(31.8%)으로 가장 집중된 광산구에 9억 2500만원이 배정됐다. 이어 150곳이 지정된 북구에 8억 7500만원, 서구(85곳) 5억 2500만원, 남구(69곳) 4억 3500만원, 동구(41곳) 2억 9000만원 순으로 사업비가 교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올해 정비의 핵심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확충이다. 먼저 각 자치구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해,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최소 1곳 이상 의무적으로 분리·개선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되면서, 5개 자치구에 각 7000만 원씩을 균등 배분해 340m씩 총 1700m 길이의 방호울타리를 신설한다.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종점 노면표시 정비도 현장 상황에 맞춰 궤도를 수정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주변 노면표시 정비를 마친 만큼, 올해는 원아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는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특별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엔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텅 빈 냉장고, 다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 #사랑의도시락 배달
-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후원 문의 1811-1004